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설명 자료

2018. 8.



법 무 부

목 차

1	NAP 일반 및 개요	1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1
1-2.	NAP 수립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2
1-3.	NAP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가 수립하는 이유	3
1-4.	NAP는 법률상의 근거없이 수립되므로 위법한 것인지	4
1-5.	NAP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5
1-6.	NAP는 소위 ‘후진국형’ 정책이라는데	6
2	제3차 NAP 수립 절차 등	7
2-1.	제3차 NAP는 제2차 NAP가 종료된 후 1년 이상 지연되어 수립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7
2-2.	제3차 NAP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것인지	8
2-3.	제3차 NAP는 행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9
2-4.	수립된 계획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10
2-5.	일단 NAP가 수립되면 변경의 가능성은 없는지	11
2-6.	인권위도 국제사회도 기업과 인권 NAP의 별도 수립을 권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NAP에 포함시킨 이유	12
2-7.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13

1 NAP 일반 및 개요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 of Action: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입니다.

※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과 민주적 제도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인권 교육 증진을 목표로 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함

- NAP는 우리나라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NAP는 경제, 환경, 국토교통 등의 영역에서 5년 또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수립되는 다른 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합니다.

※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보전계획, 『산림기본법』상 산림기본계획,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 『주거기본법』상 주거종합계획 등 국가정책 각 영역에서 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 장애인정책기본계획 등 유사한 영역에서도 정책기본계획이 각 수립·시행되고 있음

1-2. NAP 수립 과정에서 법무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 법무부는 법무부 자체 인권 과제를 설정함과 동시에 타 부처로부터 인권과제를 제출받아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는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 법무부가 타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인권과 관련된 국정과제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내용 등을 관계부처에 제공하고, 관계부처는 그 자료를 토대로 부처 소관 인권과제를 설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NAP가 확정되면 NAP 수립이 국정과제 세부과제인 점,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시행합니다.

1-3. NAP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가 수립하는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서 정부의 인권정책결정과 추진·집행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 NAP는 정부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므로 정책수립·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수립·시행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NAP 수립 절차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 NAP는 법률상의 근거없이 수립되므로 위법한 것인지

- NAP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행정부 내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에 따라 NAP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 NAP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반드시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NA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5. NAP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 NAP는 과제를 제출한 소관 부처의 자체 예산을 통해 실현되며, NAP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1-6. NAP은 소위 ‘후진국형’ 정책이라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여러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영국(스코틀랜드) 등]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8년 6월 현재 대한민국 포함 전 세계 39개국이 NAP를 수립·시행 중임

호주(1993),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7), 남아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노르웨이(1999),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콩고민주공화국(2000), 태국(2001), 스웨덴(2002), 리투아니아(2002), 몰도바(2003), 카보베르데(2003), 모리타니(2003), 네팔(2004), 뉴질랜드(2005), 페루(2006), 나이지리아(2006), 과테말라(2007), 대한민국(2007), 스페인(2008), 중국(2009), 카자흐스탄(2009), 아제르바이잔(2011), 이라크(2011), 스리랑카(2011), 핀란드(2012), 온두라스(2013), 레바논(2013), 라이베리아(2013), 탄자니아(2013), 스코틀랜드(2013), 소말리아(2015), 우크라이나(2015)

- NAP는 각국이 수립하는 인권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국제사회가 합의하여 각 나라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그에 따라 각국이 자기 사정에 맞추어 인권신장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정한 것이며,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관한 최소의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2 제3차 NAP 수립 절차 등

2-1. 제3차 NAP는 제2차 NAP가 종료된 후 1년 이상 지연되어 수립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제2차 NAP 시행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고 제3차 NAP가 개시되는 2017년 전에 제3차 NAP가 수립되어야 했으나, 국정농단 상황과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등으로 인해 준비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 2017년 5월 대통령선거로 출범한 새정부의 인권과제를 담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2017년 10월부터 다시 제3차 NAP 수립절차를 재개하였고, 공청회와 18차례에 걸친 인권·시민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정부 관계부처와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인권정책과제를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 절차를 거치느라 1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2-2. 제3차 NAP는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수립된 것인지

- NAP 수립 과정 중에 공청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NAP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단체와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단체 등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와 달리 간담회는 일정하게 제한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이므로 간담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NAP 관련 간담회 장소에 사전통보없이 참석한 사람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바도 없습니다.

2-3. 제3차 NAP는 행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한지

- NAP는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정책 등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예고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 유사 성격의 기본계획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다만 인권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3차 NAP초안이 만들어지는대로 국민에게 공개하였으며, NAP가 확정되는 때에도 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2-4. 수립된 계획의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제3차 NAP의 정책과제는 이를 제출한 소관 부처·기관에서 이행을 담당하고,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조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에서는 매년 말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며, 매 회차 계획이 만료하는 해에는 전체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2-5. 일단 NAP가 수립되면 변경의 가능성은 없는지

- 국내·외 상황 또는 여건이 크게 변해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정책협약회의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제1·2차 NAP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의 구성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보완하여 수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2-6. 인권위도 국제사회도 기업과 인권 NAP의 별도 수립을 권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NAP에 포함시킨 이유

- 기업의 경영에 인권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기존 NAP의 과제 중 상당 부분이 기업과 인권 분야로도 포섭 가능하고, 노동권 및 노동자의 단결권 관련 과제들이 그 일례입니다.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NAP를 수립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인권에 관한 정부정책을 망라하는 NAP가 이미 존재하므로, 정부정책의 중복을 막고 인권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서 인권의 증진에 관한 정책과제를 기존의 NAP 안에 포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습니다.

2-7. 인권 보호 대상을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지

- NAP는 기본권에 관한 계획이 아닌 인권기본계획이고,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과는 층위가 다른 개념입니다.
- 국제인권 기준과 개헌안의 기본권 주체를 반영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인권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였고,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일 뿐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아닙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NAP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정책 대상이나 급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라의무도 개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NAP의 목적차인 인권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목표로 제시하였을 뿐입니다.